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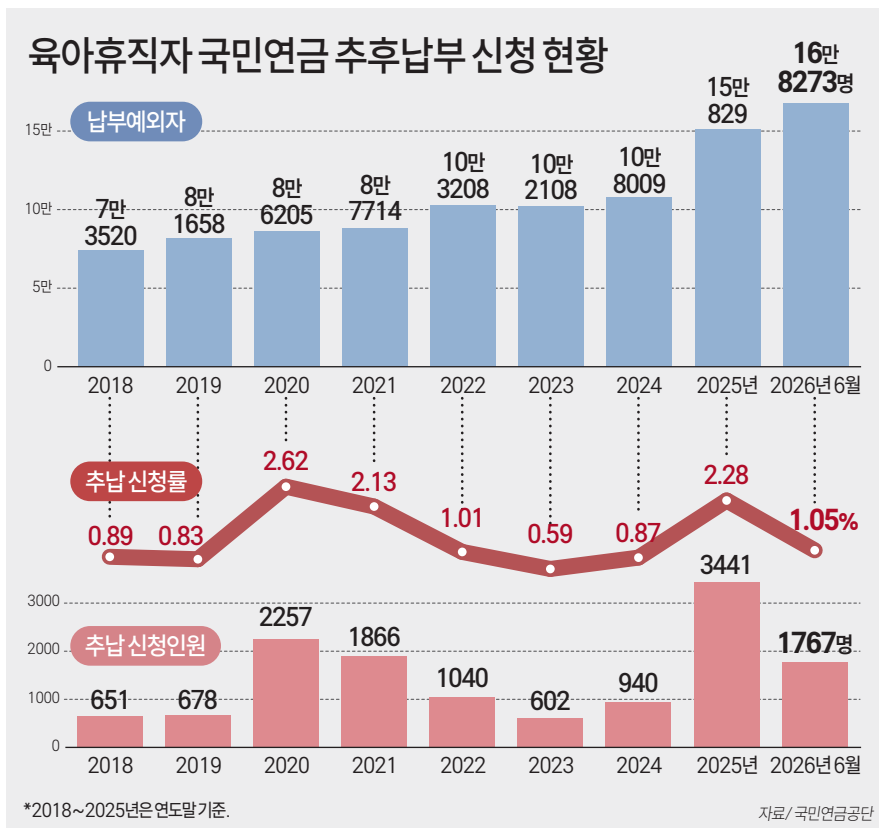
#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유명무실’… 100명 중 2명 신청

지난해 추납 제도 신청률 2.28%  
낮은 인지도·높은 비용부담 등 영향  
김주영 의원 “공단, 제도 홍보 필요”

육아휴직으로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게 해 가입 기간을 채워주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 기회와 수령액을 늘려주는 추납 제도 신청률이 2%대에 그칠 정도로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가 제도에 익숙치 않고,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추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김포시갑)이 지난 달 2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15만82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추납 신청 인원은 3441명으로 신청률은 2.28%에 그쳤다. 육아휴직자 100명 중 2명만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추납 제도를 신청하는 꼴이다.

2025년도 추납 총 신청금액은 81억 3484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36만4092원이었다.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은 1.05%, 신청금액 40억 3768만원으로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납부예외자로 처리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복직 후 일괄 정산돼 납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추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했다. 추납 제도는 별도 공단의 통지 없이 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별도로 추납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육아휴직자가 추납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휴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목돈 부담에 추납이 꺼려진다고 지적했다. 김 모씨(33)는 “육아휴직 후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보험료를 2배 내야 하는 것인데, 굳이 수백만원의 목돈을 납부해야 할 연을 이득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류 모씨(32)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육아휴직 후 추납할 생각까지는 안 해봤다”며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 제도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니 정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했다.

재직 중 회사와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절반씩 부담해서 내는 것과 달리 추납 시엔 노동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커진다. 일례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올해 기준 9.5%의 보험료율로 총 34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 분납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이자로 1년만 기정기예금이자율이 가산된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평균 추납 신청금액은 236만4092원으로, 일반 직장인이 한 번에 납부하기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에 일각에선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중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가 유예되지만, 복직 후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육아휴직자에게 추납 제도와 추납 보험료 등을 설명해 육아휴직자가 추납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연금액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추납하는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추납자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월 임금이 높을 때 추납 제도를 신청하고 2차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까지 인정받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자에게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목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추납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서 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 가전업계, 원가 급등… ‘프리미엄·구독’ 대응

삼성 AI·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  
LG 2분기 구독사업 매출 5% ↑

인공지능(AI) 서버수요가 밀어올린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가전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범용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TV와 생활가전의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구독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9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 4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6달러로 전월보다 4%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도 전월 대비 0.4% 오른 30.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 압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계약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10~15%, 15~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4K TV에 주로 탑재되는 4GB DDR4 계약가격도 최근 1년 새 4배 이상 뛰면서 TV 제조원가(BOM)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2.5~3%에서 6~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8월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도 주요 부품과 원재료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평균가격은 올해 상반기 전년 연평균 대비 2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DX부문의 전체 원재료 매입액도 전년 동



삼성전자 OLED TV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 삼성전자

기 대비 6.3% 증가한 41조5392억원으로 집계됐다.

LG전자도 TV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의 영상기기 부품용 칩 평균가격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연평균 대비 37.4% 상승했다.

반면 상반기 삼성전자의 TV·모니터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평균가격은 전년 연평균 대비 약 4%, LG전자의 LCD 모듈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1.4% 각각 하락했다. 패널 가격 하락은 TV 제조사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BOE와 TCL CSOT, HKC 등 중국 주요 패널업체들이 국경절을 전후해 감산에 나서면서 4분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가 부담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TV·생활가전 사업을 포함한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는 지난 2분기 매출 14조5000억원, 영업손실 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양사는 고부가 제품과 구독 사업을 확대하며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삼성

전자는 AI·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기존 ‘AI 구독클럽’을 ‘삼성 AI 구독’으로 개편했다. 신혼·1인·시니어 가구 등 고객층별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공공기관과 호텔·의료·금융 등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업간거래(B2B) 구독도 새로 선보였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불륜존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과 구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분기 구독사업 매출은 6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TV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광고·콘텐츠 기반 webOS 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제품에 생산능력을 우선 배분하면서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TV와 생활가전은 원자재와 물류비 등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공급망 효율화 등을 통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3차 ESS 중앙계약 1180MW ‘역대 최대’ 배터리 3사, 소재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

생산 확대·소재 공급망 확충

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 기반과 소재 공급망을 확충하며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수주 경쟁에서는 국내 산업 기여도와 화재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만큼 국내 생산과 소재 조달 능력에 안전 기술을 더한 각사의 공급 역량이 물량 확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공고한 3차 ESS 중앙계약시장 물량은 육지 1100MW와 제주 80MW 등 총 1180MW다. 앞선 1·2차 사업의 공고 물량이 각각 540MW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일 공고 기준 역대 최대 물량이 풀리면서 배터리 3사는 고객사와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수주에 대비한 생산과 소재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1·2차 사업에서 경쟁사보다 적은 물량을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생산과 소재 국산화를 앞세워 수주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2027년부터 연간 1GWh 규모의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고 수요에 따라 생산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 소재도 국내 공급사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LFP 양극재는 포스코퓨처엠과 장기 공급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을 앞세워 이번 입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SS 솔루션에는 배터리 이상을 사

전에 감지하는 소프트웨어와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일체형 ESS 솔루션 ‘SBB 2.0’이 UL 솔루션즈의 대형 화재시험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위해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공장은 앞선 1·2차 사업에 공급하기로 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삼원계 배터리의 생산 거점이다. LFP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는 지난 3월 엘앤에프와 체결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통해 2027년부터 3년간 공급받기로 했다.

SK온도 국내 생산라인 전환과 소재 확보를 통해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 서산공장의 기존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연산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을 최대 6GWh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산라인 전환에 맞춰 국내 양극재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엘앤에프와 약 1600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포스코퓨처엠과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내 생산과 소재 조달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과 화재 안전성을 알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주 물량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



metro